

한국산림기술인회 기고

산림재난 시대, 치산치수의 역할과 과제

글_정 병 결 한국산림기술인회 감사



우리나라 산림재난 대응의 주체인 산림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3조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예산은 2007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인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여, 2017년 2조 원 시대를 연지 9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15.6% 증가한 3조 260억 원의 규모이며,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산림재난 대응과 임업인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육성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한다. 최근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방지,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방지 등 3대 산림재난에 대한 「산림재난 방지법」

이 2025. 1. 31.자로 제정되어 내년 2. 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산불과 산림병해충은 논외(論外)로 하고, 우선은 산림재난의 비중이 가장 많은 치산분야(산사태)에 대하여 논하기로 한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정책으로 현대에는 국책사업으로 발전해 산림보호·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산과 물을 잘 관리하여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산을 먼저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농경사회가 기본이었던 우리 민족에게 젖줄의 근원인 물은 생명의 원천이나 다름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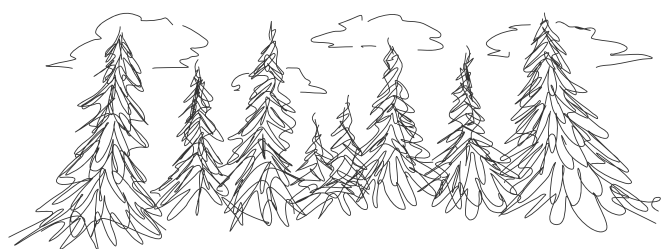
치산은 1970~1980년대의 산림녹화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는 산사태방지를 위해 나무를 심는 등 산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수는 강의 하구보다 계곡의 물부터 다스리는 것으로, 저수지나 보(Dam)를 상류에 설치해 물의 이용과 자연재난에 대처하여 왔다. 우리 숲이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약 190억 톤(15% 정도)으로 소양강댐 유효저수량의 10배에 달하며, 숲가꾸기 사업은 숲이 저류 할 수 있는 물의 양을 연간 약 50억 톤을 더 늘릴 수 있으며 이는 소양강댐 3개를 더 건설해야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으로 2030년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4개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고하며, 이 때문에 21세기는 물 전쟁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 산은 나무가 없는 황폐한 불모지였다. 1973년부터 20여년 동안 치산녹화 계획을 수립 최선을 다해 국토녹화를 끝낼 수 있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는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 치산 치수 분야 간 상충되는 부분과 산림자원조성 사업의 예산편성에 아쉬움이 있어 일부 정책 전환, 새로운 제도 도입, 예산의 규모에 맞는 정부조직 재정비 등 산림 및 물관리 시행의 발전을 위해 본 지면을 빌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산림자원조성 사업예산 확충

먼저, 산림자원조성 사업예산을 확충하여 내년 지방 이양 예정인 민유조림·숲가꾸기 사업을 국가업무로 되돌려야 한다. 수년전부터 ‘민유임도’는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약 1천억 원)함에 따라 주민 체감이 높은 상수도, 마을회관 증·개축 등의 우선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민유조림·숲가꾸기 사업(예산 약 2,600억 원)도 지자체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비 충당도 어렵다’는 지자체가 산림사업의 예산을 자율 편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댐 등 숲이 기여한 부분을 별도로 산출, 이를 재원으로 수원함량의 근간인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국가지원 편성예산으로 바로 되돌려야 한다.

임업직불금 필요 자원 마련

둘째, 산주들의 임업직불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은 전 국토의 63%이며, 이 중 사유림이 66%이다. 21만 명의 임가(林家) 중 2025년에 약 2만 1000명만이 임업직불금 약 517억 원의 혜택을 받았다. 더 많은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참여를 위하여 단가인상 및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한 재원의 확보는 산림조성사업과 함께 수원함양림 지정면적을 고려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에서 충당하는 정책과 제도마련을 요구할 시점으로 보인다.

건강한 숲을 위한 국가 주도 필요

셋째, 2000년대 초에는 중앙부처별 예산이 1조 원 이상이면 정부조직법상 외청(外廳)에서 부(部)”로 승격이 충분하다는 일부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산림 부국으로서 공공재(公共財)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숲을 건강하고 울창하게 조성하는데 국가의 주도가 필요하며**, 산림부문 예산도 격에 맞도록 충분히 확충되었으므로, 향후 정부조직 개편 시 “산림청(山林廳)”을 “국가산림부(國家山林部)”로 승격시켜 산림재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지킴이가 되길 소망해 본다.

